경기도 복지발전소 경기복지재단

vol.168

ISSN 2508-593x

G-Welfare Weekly Report

경기복지재단 | 발행인 (양복완) |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150 신관 3층 | Tel. 031-267-9368 | http://ggwf.gg.go.kr | 2018.08.30

01 현안 브리프

지역화폐의 현황과 도입 쟁점

최준규(경기연구원 연구위원)

01 지역화폐의 개념 및 동향

- **(지역화폐의 개념)** '지역화폐(local currency)' 란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스스로 돈을 발행하여 유통시키고, 이를 통해 주민들이 서로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주고받는 경제활동 방식'으로 정의
  -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여 유통하는 경제활동 방식을 통칭하고 있지만, 그 목적과 형태에 따라 다양한 표현과 형태가 존재
  - 실제로 지역화폐는 용어는 그 목적에 따라 '지역화폐(local currency)', '공동체화폐(community currency)', '보완화폐(complimentary currency)'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
- **(지역화폐의 지향점)** 지역화폐 유형은 크게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이라는 두 가지 지향점 사이의 스펙트럼을 형성
  - 지역화폐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목적 모두를 지향하지만, 어느 가치에 우선을 둔 운영체계를 가지느냐에 따라 기대효과의 차이 발생

〈그림〉 지역화폐 운영형태 및 기대효과 *

공동체 활성화 <----------> 지역순환경제 구축

매개물(담보)	없음(신뢰기반) <----------> 있음(물적자산)
화폐 안정성	낮음 <----------> 높음
구성원 간 신뢰	높음 <----------> 낮음
환전 가능성	상호신용통화 <------> 불태환통화 <------> 태환통화
통화 공간	좁음 <----------> 넓음
주요사례	레츠 / 킴가우어 / 브리스틀파운드 / 지역상품권

*최준규(2018).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의 쟁점과 과제", 경기연구원.

- **(지역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 주목)** 국내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 도입 증가
- **(지역상품권 도입현황)** 2016년 말 기준으로 56개의 지역상품권이 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에는 6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품권 운영 예정(행정안전부, 2017)
  - 행정안전부는 '지역상권 활성화 및 공동체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의 행정구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으로 고향사랑 상품권 제도 운영
  - 성남시의 경우, 2006년 20억원 규모로 성남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2017년에는 260억원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가맹점 역시 7,769개소로 증가(경기일보, 2018.03.21.)
- **(경기도 민선7기 추진방향)** 2016년 말 기준으로 56개의 지역상품권이 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에는 6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품권 운영 예정(행정안전부, 2017)

- 민선7기 경기도는 주요공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2년까지 지역화폐를 도입·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경기북부시민신문, 2018.08.21.)
- 경기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1조 5,905억원 가량을 발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경기도의 예산 지원액은 4년간 총 2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경기북부시민신문, 2018.08.21.)

02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쟁점

- **(지역상품권의 화폐성격)** 지역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과 같이 지역순환경제 구축의 목적을 강하게 보이는 지역화폐 유형
  - 지역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 논의는 지역화폐 관련 정책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으나, 실제 화폐 유통과정에서 1차 이용 이후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 전통적인 화폐개념과 차이 존재
  - 지역상품권의 형태가 전통적인 지역화폐의 형태와는 차이를 보이지만, 전통적인 경기부양 정책과 상당히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평가(문진수, 2014)
-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 지역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가 가지는 경제적 효과는 크게 지역소득의 역외유출 감소효과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따른 2차 소비 증대 등으로 발생
  - 이한주·김병조(2017)의 국회예결위 보고서를 통하여 정부의 각종 현금지급 수당의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지불할 경우 지역단위의 생산·부가가치·취업유발효과 발생 가능성 제시
  - 전대욱(2018)은 지역상품권 유통 사례를 기반으로 지역상품권 유통이 지역단위의 주민 및 소상공인의 1인당 소득창출 효과를 창출한다고 제시
  - 경기도 차원에서 대규모로 지역화폐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 추정에 있어서 투입비용 대비 적절한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추가적 검토 필요
- **(지역화폐 운영비용)** 지역화폐의 전면적 도입을 위해서는 지역화폐 운영을 위한 운영비용이 커지는 만큼 운영비용 대비 효과성 검토 필요
  - 행정안전부(2017)에 따르면, 25억원 규모의 지역상품권을 2종의 지류상품권으로 유통시킬 경우, 소요되는 예산규모로 연간 약 2억 2천만원 규모를 제시
  - 추산된 예산에는 기본적인 지역화폐 제작비용과 더불어 판매 및 환전 수수료, 할인제도 운영, 홍보비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판매 및 환전 수수료 절감, 홍보 및 할인율 절감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 모색 필요
- **(지역화폐 운영형태)** 현재 지역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의 일반적 형태는 지류상품권이지만, 향후 카드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화폐 운영 가능
  - 지역화폐 실험이 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정착이 미흡했던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거래비용의 문제를 지적(황영순·오동하, 2018)
  - 모바일 환경, 블록체인 기술 등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화폐 도입을 통하여 지역화폐의 거래비용 절감 가능성 증대
  - 행정안전부와 한국조폐공사는 블록체인과 클라우드 기반의 지역상품권 운영시스템을 설계하고 2019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
  - 시흥시는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흥시 지역화폐 '시루'를 스마트폰 App으로 시루를 충전하고 QR코드 등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9년부터 종이화폐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발표

- **(기본소득 도입의 정책도구)**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화폐는 기본소득의 정책효과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정책도구로 제시 가능
  - 기본소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으로 노동유인의 증대, 소득재분배, 경제활성화 등에서 정책효과 발생 가능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경우, 지방재정 투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강화됨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타당성을 강화

03 경기도 지역화폐 성공을 위한 제언

- **(기초자치단체와의 정책합의)** 경기도 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와의 정책 합의 선행 필요
  - 지금까지 논의된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권자는 경기도 내의 31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시·군 단위의 정책합의 선행이 필수
  - 민선7기 시장군수 간담회 등을 통하여 1차적인 합의가 진행된 상황이지만, 향후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경기도 지역화폐 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광역-기초 사이의 긴밀한 협의구조 필요
  - 경기도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발행규모 가운데 약 56%에 달하는 8,852억원은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주요 정책사업용으로 발행되는 만큼 민선7기 정책사업의 실행구조 역시 광역-기초 간의 긴밀한 협의가 우선
- **(지역화폐 운영을 위한 제도정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형평성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표준조례(안), 매뉴얼 등 제도정비 필요
  - 경기도와 31개 기초자치단체가 2019년도부터 예산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2018년 하반기 관련 조례의 제정 및 예산확보, 협약체결 등 선제적 제도 정비 지원
  - 관리 및 운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에 대한 일체감·공동체성의 미흡 등으로 '불법환전'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증대함에 따라 제도적 보완방안 검토
  - 제도설계 단계에서부터 31개 시군과의 협치 구조를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경기도 지역화폐 시스템 구축 필요
-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설계)**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31개 시군에서는 각 지역에 적합한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정책설계 추진
  - 경기도 지역화폐의 발행주체는 기초자치단체인만큼, 광역의 재정정책 도구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정책설계 검토 필요
  - 지역이 가지는 산업구조, 인구구조 등 지역여건에 따라 가맹점 확보, 유통 시스템 등에서 차별적 설계가 가능하고 추가적인 정책효과 산출 가능
- **(사회혁신 도구로서 지역화폐 활용)** 지역화폐가 가지는 속성에 따라 지역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회문제·지역의제와 결합된 사회혁신의 도구로 활용
  - 자원봉사, 사회복지, 문화관광, CSR,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지역의제와 결합하여 보다 근본적인 사회혁신의 도구로 지역화폐 설계 가능
  - 향후 경기도의 발행규모를 고려하면, 새로운 사회주체의 형성, 산업분야의 도출 등을 촉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도구의 가능성 대두
  - 블록체인 등 기술 환경의 변화와 지역과 주민의 수요에 기초한 사회혁신 의제가 합쳐진다면 보다 효과적인 형태의 사회혁신 도구로 자리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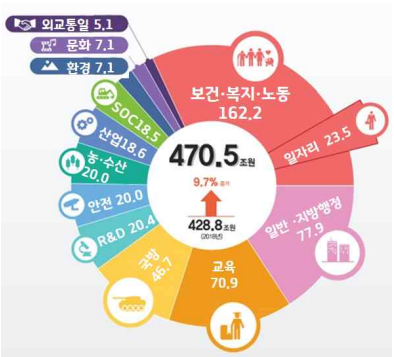
02 중앙정부 정책동향

정부, 2019년 예산안 발표

01 주요 내용

- 정부는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무회의를 거쳐 9.3(월)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

〈그림〉 분야별 재원 배분



*단위: 조 원

- 총지출은 9.7% 늘어난 470.5조원
  - 정부는 최근 세수 호조에 따른 수입증가를 감안해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기조로 예산안을 편성
  - 전체 12개 분야 가운데 11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사회간접자본(SOC)만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정부 예산안(19조원) 대비 5천억원(-2.3%) 축소된 18조 5천억원으로 편성
  - 늘어난 내년 예산은 ①일자리 창출, ②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③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④국민의 삶의 질 개선, 그리고, ⑤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중점 투자
- 보건 · 복지 · 노동 분야는 복지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7.6조 늘어난 162.2조원(34.5%)
  - '18년 대비 17조6천억 원(12.1%) 증가하여 최대 증액되었으며,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5%로 상승, 역대 최대치를 경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예산	292.8	309	325.4	341.9	355.8	375.4	386.4	400.5	428.8	470.5
복지분야	73.9	78.9	84.8	88.7	97.2	115.7	123.4	129.5	144.7	162.2

① **일자리 예산**을 23.5조원으로 확대(19.2→23.5조원, +4.2, 22.0%)

-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가 확대되며, 사회서비스 ·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도 확충

* 돌봄서비스 등 여성친화적 일자리 확대 12→13.6만개(+1.6만개)
* 노인일자리 확대 51→61만개(+10만개, 사회서비스형 2만개 신설)
* 장애인 직접일자리 확대 1.7→2.0만개(+0.3만개)
* 사회서비스 일자리(9.4만개) : 보육교사 · 간호간병서비스 등 복지 분야 8만명, 아동안전지킴이 등 1.3만명
* 공무원은 현장인력(경찰, 집배원 등) 중심으로 2.1만명(국가직) 충원

②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R&D 예산을 20조원 이상 확대(19.7→20.4조원)

- 플랫폼 경제기반 투자와 8대 핵심 선도분야에 5.1조원 배정, 산업단지환경개선 펀드출자 5배 확대 등

③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복지분야 예산을 144.6→162.2조원으로 확대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등 기초생활보장 강화(11.0→12.7조원), 기초 · 장애인연금 인상(9.7→12.2조원) 등 저소득층 소득지원 확대
- 영세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속 지원(2.97→2.82조원)
-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업급여 지급액 · 지급기간 확대 등 보장성 강화(6.2→7.4조원)

④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의 방안으로,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총 8.7조원을 투자하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주거지원 확대

- 문화체육관광 등 국민의 여가·건강활동에 1.6조원을 지원하고, 도·농·어촌 지역의 활력 제고에 3.6조원을 투입
-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복지시설, 저소득층 주택, 다중이용시설을 개선(3.4조원)
- 신혼부부 대상 신혼희망타운 1.5만호 공급,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 출산급여 지급,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수준 확대 등 출산·돌봄 부담 경감

⑤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국방비 8.2% 확대

- 방위력개선비 15.4조원, 자살예방 인력 양성, 독거노인 대상 우울증 검진 및 모임활동 지원 확대

• 2019년 복지부 총지출은 '18년(63조1554억 원) 대비 14.6%(약 9조2204억 원↑) 증가

- ①소득보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②사람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및 사회적 가치 투자, ③저출산 위기 대응 및 미래성장 동력 확충에 집중 투자

구 분	주요 사업별 예산
소득보장 강화	• (생계급여) ('18년) 3조7216 → ('19년 안) 3조7508억 원(292억 원, 0.8%) • (의료급여경상보조) ('18년) 5조3466 → ('19년 안) 6조3915억 원(1조449억 원, 19.5%) • (긴급복지) ('18년) 1,113 → ('19년 안) 1,422억 원 (309억 원, 27.7%) • (기초연금) ('18년) 9조1229 → ('19년 안) 11조4952억 원(2조3723억 원, 26.0%) • (장애인연금) ('18년) 6,009 → ('19년 안) 7,197억 원(1,189억 원, 19.8%) • (청년희망키움통장) ('18년) 110 → ('19년 안) 190억 원(80억 원, 72.7%)
일자리	• (사회서비스일자리) ('18년) 4,545 → ('19년 안) 1조854억 원(6,309억 원, 138.8%) • (노인일자리) ('18년) 6,349 → ('19년 안) 8,219억 원(1,870억 원, 29.5%) • (장애인일자리) ('18년) 957 → ('19년 안) 1,208억 원(250억 원, 26.2%) • (자활사업) ('18년) 3,756 → ('19년 안) 4,910억 원(1,154억 원, 30.7%)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8년) 7,337 → ('19년 안) 9,219억 원(1,882억 원, 25.7%) • (사회서비스원 설립) 신규 → ('19년 안) 68억 원 (순증)
사회적 투자	•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신규 → ('19년 안) 81억 원 (순증) • (치매관리체계 구축) ('18년) 1,457 → ('19년 안) 2,333억 원(876억 원, 60%) • (노인요양시설 확충) ('18년) 859 → ('19년 안) 1,129억 원(270억 원, 31.4%) •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18년) 604→ ('19년 안) 709억 원(105억 원, 17.3%) • (연명의료제도화 지원) ('18년) 27억 → ('19년 안) 55억 원(28억 원, 105.6%)
노인·장애인·아동	• (노인돌봄서비스) ('18년) 987→ ('19년 안) 1,124억 원(137억 원, 13.8%) • (노인장기요양보험) ('18년) 8,058 → ('19년 안) 9,960억 원(1,902억 원, 23.6%) •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18년) 321 → ('19년 안) 342억 원(21억 원, 6.5%) • (장애인활동지원) ('18년) 6,907 → ('19년 안) 9,685억 원(2,778억 원, 40.2%)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규 → ('19안) 116억 원(순증) • (아동발달지원계좌) ('18년) 196 → ('19년 안) 209억 원(13억 원, 6.9%) • (지역아동센터 지원) ('18년) 1,587 → ('19년 안) 1,731억 원(144억 원, 9.1%) • (요보호아동 지원) ('18년) 10 → ('19년 안) 131억 원(121억 원, 1,210%)
저출산 대응 주요사업	• (아동수당) ('18년) 7,096 → ('19년 안) 1조9271억 원 (1조2175억 원, 171.6%)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8년) 684 → ('19년 안) 686억 원(2억 원, 0.3%) • (다함께 돌봄) ('18년) 9 → ('19년 안) 138억 원(129억 원, 1,390.6%) • (영유아 보육료) ('18년) 3조2575 → ('19년 안) 3조4053억 원(1,478억 원, 4.5%) • (시간제 보육) ('18년) 97 → ('19년 안) 110억 원(13억 원, 13.2%)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18년) 449 → ('19년 안) 777억 원(328억 원, 73%)

• 정부의 확장적 예산을 위한 2019년의 조세부담률은 20.3%로 사상 처음 20%를 넘어서며, 세금에 사회보험료까지 고려한 국민부담률은 올해 26.6%에서 내년 27.8%까지 상승할 전망

02 경기도 시사점

• 중앙정부의 복지 예산 확대로 지방정부의 의무지출이 늘어나고, 민선 7기 주요 공약 실현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 등으로 내년 경기도 예산 규모도 크게 증가할 것이나, 일자리감소, 양극화 심화, 저출산 등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분야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할 것임

03 시·도/시·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1. 고향사랑 상품권 운영 현황

최근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고향사랑상품권의 지자체별 운영 현황을 살펴봄

- 고향사랑 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지자체별 고향사랑 상품권 활성화 조례에 근거하여 발행
  - 지역 내에서 유통되기 때문에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민의 내 고장 상품 소비와 유통을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
  - 발행 형태는 종이 상품권이 대부분이며, 최근 서울 노원구는 블록체인 방식의 지역화폐를 도입

〈표〉 발행 형태 예시*

종이상품권 : 금액별로 발급되며, 가맹점에서 사용	노원(NW) : 회원이 QR코드를 클릭, 가맹점 제시

*자료: 한겨레, 2018.7.17.일자 기사

- 현재 총 65개 지자체에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운영 중이며 지난해 조폐공사 공급액 기준 3천100억원 규모로 발행

〈표〉 상품권 발행 지자체 현황**

구분	계	광역	기초	지자체명
총 계	65	2	63	
서 울	1	–	1	노원구
인 천	2		2	서구, 강화군
광 주	1		1	남구
경 기	6	–	6	성남시, 남양주시, 부천시, 안양시, 가평군, 시흥시,
강 원	9	1	8	강원도, 삼척시, 양구군, 철원군화천군, 인제군, 고성군, 춘천시, 정선군
충 북	9	–	9	진천군, 단양군, 과산군,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충 남	7	–	7	서천군, 계룡시, 부여군, 청양군, 태안군, 아산시, 예산군
전 북	6	–	6	군산시, 완주군, 남원군, 김제시,장수군, 임실군
전 남	9	–	9	광양시, 강진군, 순천시, 여수시, 나주시, 함평군, 곡성군, 담양군, 영암군
경 북	6	–	6	포항시, 칠곡군, 고령군,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경 남	8	–	8	거제시, 하동군, 고성군, 합천군, 남해군, 의령군, 산청군, 함안군
제 주	1	1	–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 행정안전부(201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65개 지자체의 사업 성과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화폐 도입과 발행 규모 자체보다 실질적인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2. 재단 주요행사 안내

사업명	주요내용
제4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 일시/장소 : 8.31.(금) 10:00~16:00 / 경기도인재개발원 306호 • 대 상: 계획 수립TF(공무원, 학계 및 현장전문가, 연구진) 팀원 100여명 • 내 용 : 계획의 목표,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등 논의 • 문 의 : 정책연구실 사회정책팀 (☎267-9384)

04 FACT CHECK

연천은 합계출산율과 노령화지수가 모두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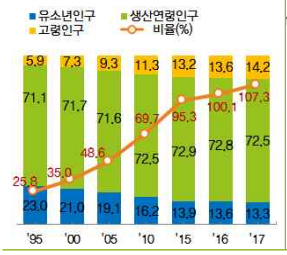
- 2017년 출산통계에 따르면, 연천군의 합계 출산율은 1.59으로 경기도 시군 중 1위이며 경기도 평균인 1.07보다 0.52이 높은 수치임
  - 합계출산율은 한명의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지역의 합계출산율이 높다는 것은 지역의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
- 그러나 2017년 기준, 연천은 노령화지수는 208.9*로 나타나 경기도 평균의 78.6보다 높고 도내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
  - 노령화지수는 65세 이상 인구수를 유소년(15세 미만)인구 수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수치로 노령화지수가 높다는 것은 지역에 상대적으로 노인이 많다는 뜻
- 화성시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1.39로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높으며, 노령화지수는 42.4로 나타나 유소년 인구가 많아 노령화지수가 낮다는 예측가능한 결과를 보여줌
  - 연천의 합계출산율과 노령화지수가 모두 1위라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로, 두 지표를 연관지어 지역의 인구 상황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음
-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연천군의 실제 출생아수가 많지 않음에도 가임 여성 수가 적어 산식의 분모가 적어서 발생한 결과로, 2017년 연천의 출생아 수는 338명에 그침
-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지표를 활용할 때는 단일 지표가 아닌 관련성 높은 지표들을 모두 검토하는 등 면밀한 분석이 요구됨

*통계청, 2017년 말 기준, 인구등록 인구를 바탕으로 계산

05 통계로 보는 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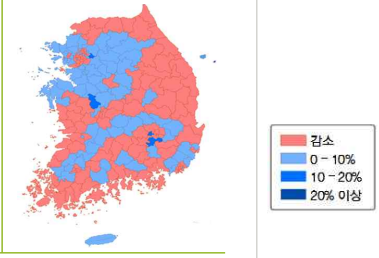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연령 인구구조 및 노령화지수



시도별 고령인구 및 비율

시군구별 인구 증감률



자료: 통계청, 2017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보도자료(2018.8.27.)

- 2017년 고령인구는 14.2%로, 노령화지수는 2016년 100.1에서 107.3으로 7.2 증가
-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남(22.0%), 경북(19.0%), 전북(19.0%) 순
- 시군구 중 인구증감이 큰 지역은 경기 화성시로, 66만명에서 71만명으로 8.1%가 증가
  - 세종시도 두 번째로 인구증가가 커서 24만명에서 28만명으로 14.1%가 증가
  - 반면, 대구 달서구는 60만명에서 58만명으로 2.3%가 감소하였고, 서울 노원구도 56만명에서 54만명으로 2.1%가 감소